

| | |
|--------------|-----------------------|
| 의안번호 | 제 호 |
| 의 결 연 월 일 | 2015년 2월 일 (제337회)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 | |
|-------|------------|
| 제 안 자 | 정책복지위원장 |
| 제안연월일 | 2015년 2월 일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 | |
|----------|--|
| 의안 번호 | |
|----------|--|

제안연월일 : 2015. 2. .
제안자 : 정책복지위원장

1. 제안이유

- 정부와 정치권에서 지방의 의견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노골화하고 있는 바, 이는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라는 정부의 기본 원칙이자 약속을 정부 스스로 어기는 처사이며, 지방이 살아야 나라가 잘 살 수 있다는 세계적 흐름에도 역행하는 처사임.
- 이에 정부와 정치권에 수도권규제완화 관련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아울러 “先 지방발전, 後 수도권규제 합리화” 약속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의미에서 건의문을 채택하고자 함.

2. 주 문

- 붙임 건의문과 같음
- 붙임 :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문

3. 건 의 처

-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국회산업통상자원위원회,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중단 촉구 건의안

존경하는 박근혜 대통령님 !

정의화 국회의장님 !

정홍원 국무총리님 !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님 !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님 !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님 !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님 !

박기춘 국회 국토교통위원장님 !

지역 간 균형 발전을 위한 국토의 이용개발과 지역경제의 육성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된 국가의 의무이자, 박근혜 정부가 제시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발맞춰 국가의 경제 도약을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개혁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정부의 정책방향에는 적극 동의합니다.

그러나, 수도권 규제완화가 마치 일자리 창출 및 투자 활성화의 특효약인 양, 지방자치단체와의 의견 조율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려는 일련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습니다.

현 정부는 출범 이후, 총 일곱 차례에 걸친 투자활성화·경제활성화 대책 발표를 통해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개발 계획 등 사실상 기업과 인력·자본의 수도권 쏠림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정책들을 제시하면서, 수도권 규제 완화 정책을 노골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14. 12. 28)에서는
△수도권 유턴기업에 대한 재정지원 허용,
△항만 및 공항 배후지 개발 제한 완화,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증설을 위한 입지규제 완화,
△경제 자유구역 내 국내기업 공장총량제 적용 배제 등
수도권 규제완화와 직결되는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하기로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는 박근혜 정부 출범 시 국정과제 중 하나인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촉진’ 과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합리화” 라는 정부가 제시해 온 원칙과 약속을 굳게 믿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밤낮없이 땀 흘려온 비수도권 지역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며, 더 나아가 정부 스스로 국민들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입니다.

현재,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50%, 지역내 총생산(GRDP)의 50%, 예금의 70%, 정부투자기관의 89%, 100대 기업 본사의 95%가 밀집해 있어 경제적 인프라의 불균형이 심각 한 바 수도권 규제마저 풀리게 되면, 인구 및 기업의 수도권 과밀화, 집중화의 가중으로 지역경제의 침체 및 공동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격차는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불균형 차원을 넘어 비수도권의 수도권 예속화라는 회복할 수 없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것이고, 중국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동반 쇠퇴의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음이 자명한 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 논리는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습니다.

이에 충청북도의회 의원 일동은 피폐해진 지방의 미래를 더욱 암울하게 만드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반대하고, “先 지방육성, 後 수도권규제합리화” 의 원칙에 따라 지역 경제 활성화 정책이 우선 추진되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160만 충북도민들과 함께 다음 사항의 이행을 강력히 건의 드립니다.

첫째, 정부는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의 경쟁력 강화가 헌법적 가치이자 미래를 대비한 국가 경쟁력의 기반임을 인식하고, 균형 발전을 저해하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둘째, 정부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행복도시·혁신도시 건설, 공기관·공기업을 지방이전과 더불어 지역 특화산업 육성, 지방투자 인센티브 확대, 연구개발시설 확충 및 전문인력 양성, 지역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 등 비 수도권 지역의 경쟁력 강화와 발전을 위한 실질적 정책을 우선 수립·추진해야 한다.

셋째, 정부는 규제 기요틴 민관합동회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한 수도권 규제완화 관련 과제 4건을 규제완화 대상에서 완전히 제외시키고,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추진 중인 국민적 공감대가 결여된 수도권 규제완화 조치들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2015년 2월 일

충청북도의회 의원일동